

한국원자력학회 ·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공동 기자회견

《 한국프레스센터, 2018년 11월19일 (월) 오전 10:30-11:30 》

‘2차 원자력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위한 공개질의

□ 기자회견 취지

한국원자력학회는 금년 8월에 이어 11월에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8월16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와 과학기술포럼과 함께 3자가 공동으로 정부에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개질의” 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여, 이 자리를 통해 다시 정부에 질의를 드리며 답변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원자력 국민인식조사 개요 및 결과 설명

한국원자력학회는 금년 8월 6일과 7일, 이틀간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 조사하였고, 8월16일 ‘2018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이번에는 (주)한국갤럽에 의뢰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2차 조사는 1차 조사와 동일한 문항과 방식으로 실시하되 조사시기와 표본 집단을 달리하고, (주)한국리서치와 함께 국내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이번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발표 드리는 2차 조사결과를 보면, 거의 모든 항목에서 1차 조사결과와 $\pm 3.1\%$ 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조사결과와 신뢰성과 함께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일관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2차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비중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해서도 찬성 69.5%, 반대 25.0%로 찬성이 반대에 비해 44.5%포인트 높게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원전 비중을 0%로 해야 한다는, 즉, 탈원전 해야 한다는 비율은 6.7%로, 국민 대다수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민 대다수가 원자력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3의 비율로 원자력발전의 지속적 이용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선호 발전원은 태양광이 44%로 1순위, 원자력은 34%로 2순위, 풍력은 10%로 3순위로 나타났습니다. 1차 조사와 순위변동은 없었지만, 1차 조사 때는 29.9%였던 원전

선호도가 이번 조사에서는 33.5%로 늘어난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는 원자력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국민이 점차 많아진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신재생 확대와 탈원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각각 44.8%와 46.5%로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력 부족 사태가 우려되던 지난 8월의 1차 조사와 전력 공급에 여유가 있었던 이번 11월 2차 조사는 조사시기, 여론조사기관과 표본집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두 조사의 신뢰도가 매우 높으며,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의사는 일관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차례 실시한 독립적인 국민인식 조사결과가 일관성 있게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의 지속적 이용에 찬성하며, 대다수 국민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공식적 절차를 통해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 그 수렴된 의견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공개질의

지난 8월16일 ‘1차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발표 당시, 이덕환 서강대 교수(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와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와 노력을 촉구하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 오류와 전력설비 확충계획 수정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적 대책 등 8개 항의 공개질의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은 물론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부의 워킹그룹이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는 2040년까지 에너지 수요 목표를 2017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발전에서의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비중을 25~40%로 확대한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행정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로 에너지 수요 목표를 동결하겠다는 계획은, 발표한 지 1개월 남짓 만인 올 2월 전력수요가 예측치를 크게 벗어나버린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전철을 밝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혹시 정부가 이 권고안을 시행에 옮긴다면, 국민 생활은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국가 경제 성장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발전 부문에서의 ‘에너지 믹스’ 계획은 아무 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빠진 ‘에너지기본계획’은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비발전 부문을 포함한 전체 에너지 수급 ‘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원별 목표 수요를 보면, 신재생은 2040년 수요가 2017년의 2.16배로 확대되고, 전력 수요도 10.5% 늘어납니다. 그런데 석탄과 천연가스 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석유 수요만 27.5%나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에서 마련한 기본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리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국가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계승될 수 있는 에너지 백년대계가 마련되길 바라는 열망을 담아 정부에 아래 8개 문항을 공개 질의하니,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직접 또는 다른 공개수단을 통해 답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공개질의 문항 (상세 내용은 보도자료의 첨부 참조)

- 질의 1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 오류와 전력설비 확충계획 수정
- 질의 2 :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적 대책
- 질의 3 : 전기요금 미인상 실현 가능성과 대책
- 질의 4 : 에너지 전환정책 국민의사 확인 방법
- 질의 5 :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부지 해제에 근거
- 질의 6 : 범정부적 원전수출 실현 지원 계획
- 질의 7 : 원자력 인력 양성 및 유지 장기 계획
- 질의 8 : 사용후핵연료 대책 수립 촉구

□ 맺음말

끝으로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28일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인 NRC가 한국 APR1400 노형에 대해 표준설계승인서를 발부했습니다. NRC 인증은 미국 정부가 APR-1400의 미국 내 건설을 허가하는 '안전성 확인 증명서'로서 다른 나라 원전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설계인증의 의미는 우리가 국산화한 원전이 원자력의 종주국인 미국에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아레바도 일본 미쓰비시도 중간에 심사를 포기했던 어려운 일을 성취하였다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때문인지 이 기쁜 소식이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당사자들도 대놓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은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60년의 운영기간과 전/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노다지 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력을 우리 스스로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지지와 지원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